국제통화기금(IMF)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안과 관련해 "무역 긴장을 높여 세계 경제 성장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IMF 로고. /AP=뉴시스국제통화기금(IMF)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무역이 위축되면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을 7%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독일과 일본의 GDP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16일(이하 각 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인상안에 대한 질문에 "무역과 투자를 왜곡하고 공급망을 분열시키고, 보복 조치를 촉발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코잭 대변인은 2019년 세계 각국의 무역 제한 조치가 1000여 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000여 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무역과 투자를 왜곡할 수 있다"며 "무역이 중단되고 기술 이용가능성이 붕괴되면 (세계 경제에)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코잭 대변인은 IMF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관세 보복 조치로 "경제가 분열되면 전 세계 GDP가 0.2%에서 최대 7%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비용은 둘째치고 전세계적인 무역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IMF는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잭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국가가 보다 광범위한 다자적 틀 내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제 성과에 필수적인 '개방적 무역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4일 전기차(25%→100%·연내),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날도 중국 태양광 산업을 겨냥해 태양광 양면 패널에 대한 관세를 부활시켜 14.2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대중 관세 적용 산업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며 "중국은 권익수호를 위해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 반발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